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행복나눔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행복나눔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통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2. 1일부터 2.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3. 2.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00923028
----------	----------

제출년월일: 2023. 3.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통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1)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 ~ 2.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6) 조례·규칙심의회 결과(2023. 2. 28.):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